

■ 주제발표 내용(요약)

『언론조정신청대상 보도기사의 뉴스구조 특성』

- 중앙일간지를 중심으로 -

1. 서론

‘언론분쟁’ 해결의 중추적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혹은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주요한 임무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언론중재위원회의 그간의 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양립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긍정적 평가든 부정적 평가든 언론중재위원회의 무용론을 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두 입장 모두 언론중재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확대하고, 그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사의 보도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이들 논의들 속에는 언론의 사회적 환경 감시기능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계가 담겨져 있다.

본 연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나 언론조정신청대상이 되었던 뉴스기사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언론 조정 및 중재신청이 발생하는 직접적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언론조정신청이라는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를 단순화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오보와 허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조정신청대상 뉴스보도가 잘못된 경우이다. 기사 작성 및 표현상의 잘못으로 신청인의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 등 인격권 훼손을 가져온 경우이다.

둘째는, 기사작성이 전혀 문제가 없는 ‘정보(正報)’라 가정하더라도 신청인이

그 기사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이다.

2. 연구문제

언론조정신청대상이 된 보도기사들의 뉴스구조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 신문사별로 조정신청사건의 신청인과 중심주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 조정신청대상 기사의 뉴스구조 특성은 어떠한가?

2-1 : 신문사별로 보도행태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2-2 : 신문사별 취재원 실명·익명 처리는 어떠한가?

2-3 : 신문사별 취재원 인용유형과 그 표현 형태는 어떠한가?

3.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분석대상 기사 표본추출은 2007년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 접수된 중앙일간지 기사 가운데 병합청구가 이루어진 건수 및 동일기사에 대해 각각 다른 신청인이 신청한 건수를 감안한 결과 실제 분석대상 기사로 추출된 기사는 총 164건이었다.

2) 측정항목

뉴스구조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측정항목으로는 ①신청인 유형, ②기사 유형, ③기사의 중심 주제, ④정보원 인용의 유형, ⑤기사의 보도행태 등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3) 측정항목 관련 논의들

저널리즘 측면에서 익명보도에 대한 경계가 최근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취재원의 익명처리는 기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익명보도는 취재원 보호 및 인격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논의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언론조정 및 중재과정에서는 취재원의 익명보도가 취재원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장려되는 경향도 나타난다고 하겠다.

취재원의 익명보도도 문제이지만, 익명취재원의 발언이 직접인용구로 처리되면 더욱 문제가 된다는 입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익명 취재원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특정 대상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의도로 사용할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익명 취재원의 검증되지 않은 발언을 헤드라인(제목과 부제목)으로 처리하게 되면 그 문제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 신문의 헤드라인이 갖는 기사 결정성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직접인용구는 절대로 제목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있다. 직접인용구는 기사 본문에 있는 수많은 정보 중 하나에 불과한데도 제목으로 활용하게 되면 기사 내용이 과대포장되거나 축소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용은 사람의 말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인간적인 체취를 가미하게 되며, 직접관찰에 못지 않은 사실로서의 설득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즉 기자들은 인용을 기사내용

의 사실성을 입증하는 기제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기사 본문 내용과 불일치하는 직접인용부호를 사용하는 것과 아예 기사본문에도 없는 내용의 직접인용부호를 이용한 기사제목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한편 언론보도에 의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를 피해자 관점에서 보는 관례들은 불완전한 익명처리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일부 익명보도가 취재의 불완전함과 독자들의 호기심을 부추기는 쪽으로 작용하여 당사자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킨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를 특정하는 경우는 불완전한 익명처리를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언론분쟁은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피해 당사자의 '인격권' 충돌로 요약할 수 있다. 익명처리 정도는 여기에 취재보도의 성실성과 책임성의 문제를 수반하게 된다.

4) 코딩절차

신문기사 분류 및 코딩은 연구자가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학생 1명과 함께 미리 작성된 코딩지침에 따라 164개 기사 전수를 코딩하였다. 따라서 코더 간 신뢰도는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다.

4. 연구결과

1) 신문사별 언론조정 신청인 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2007년 한 해 동안 1,043건의 조정신청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이를 신청인별로 보면 개인 50.3%, 회사 16.9%, 일반단체 13.9%, 국가기

관 9.7%, 지자체 및 공공단체 5.9%, 교육기관 2.3%, 종교단체 1.0%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중앙일간지의 신청인 현황을 보면 기사 164건 중 국가기관이 35.4%, 개인 33.5%, 이익/일반단체 14.0%, 지자체 및 공공단체 6.1%, 회사 5.5%, 교육기관 4.9%, 종교단체 0.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일간지에서 국가기관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신청인 개인은 매우 낮게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유독 중앙일간지에서 국가관련 언론조정 분쟁이 매우 높았음을 알게 한다.

2) 신문사별 중심주제 현황

언론조정신청대상 기사들을 종합하여 중심주제 현황을 살펴보면 정책/행정 (29.3%), 정치(26.2%) 등 국가기관과 관련된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신청인 개인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이는 범죄/사건/재난 (18.3%)이 그 뒤를 이었다. 교육(10.4%)과 관련한 기사도 높게 나타났다. 언론조정신청 대상 기사의 중심주제 분류에 따르자면 중앙일간지에서 유독 정치 및 정책 관련 주제가 많이 다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신문사별로 중심주제 현황을 보면 동아일보, 문화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등의 기사 수가 다른 신문사들에 비하여 많기도 하지만, 이들 신문사에서 정치, 정책·행정 관련 기사들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3) 리드기사의 가치적 술어 사용 여부

보도기사에서 리드가치가 있다는 것은 기자의 주관이 처음부터 개입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리드가치가 없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

하여 객관적으로 기사가 서술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같은 전체에서 보면 언론조정대상 기사 164건 중 90건(54.9%)이 리드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74건(45.1%)이 리드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기사 중 스트레이트 기사가 90% 이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리드가치 부여 기사 비중이 매우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스트레이트 기사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기사를 서술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으므로 조정대상 기사 중 스트레이트 기사에 리드가치를 과다하게 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다.

신문사별로 보면 세계일보(100.0%), 국민일보(83.3%), 경향신문(77.8%), 서울신문(69.2%), 문화일보(68.0%), 한겨레(59.1%) 등이 리드가치 부여를 전체평균(54.9%)보다 높게 리드에 술어 가치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리드가치를 부여하지 않은 신문은 중앙일보(69.2%), 조선일보(67.6%), 동아일보(52.0%), 한국일보(50.0%) 등이 리드가치 미부여 전체평균(45.1%)보다 리드에 술어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기사쓰기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4) 신문사별 보도태도의 차이

신문사별 보도태도를 보면 전체기사 164건 중 비판/부정적 기사(59.1%)가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중립/양비론(37.8%), 긍정/호의적(3.0%) 순이었다. 비판/부정적 기사가 많다는 것은 고발형 기사나 감시형 기사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중립/양비론 기사의 비율로 볼 때 객관적 중립적 태도를 견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일정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판/부정적 보도태도를 신문사별로 보면 경향신문(88.9%), 서울신문(84.6%), 문화일보(80.0%), 내일신문(71.4%), 동아일보(68.0%)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립/양비론적 보도태도는 세계일보(75.0%), 한국일보(66.7%), 한겨레

(59.1%), 중앙일보(53.8%), 조선일보(50.0%), 국민일보(50.0%) 등이 전체 평균 비율의 이상의 빈도를 보여주었다.

5) 신문사별 기사성격

신문사별 기사성격을 상반의견제시형과 일방의견제시형으로 나누어 보면 일방의견제시형(58.5%)이 상반의견제시형(41.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보도 기사가 2개 이상의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거나 반영하는 것보다는 어느 한 쪽 일방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반영하는 경우가 더 많았음을 보여준다.

일방의견제시형 기사는 국민일보(83.3%), 조선일보(70.6%), 중앙일보(69.2%), 한국일보(66.7%)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상반의견제시형 기사는 내일신문(71.4%), 한겨레(54.5%), 문화일보(52.0%), 세계일보(50.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6) 신문사별 실명·익명 처리

신문사별 실명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기사 중 취재원의 실명이 한 명이라도 드러나지 않는 '실명처리 무' 포함 기사는 76건(46.3%)으로 나타났다. 취재원의 실명이 최소한 한 건 이상 드러난 '실명처리' 기사는 88건(53.7%)으로 나왔다. 실명처리 무 기사는 한국일보(88.3%), 서울신문(61.5%), 동아일보(56.4%), 문화일보(5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익명처리는 모든 신문에서 그다지 높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한국일보에서 익명처리 기사가 한 건도 나타나지 않은 것은 특이할만하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한겨레 등에서는 전체 평균(22.6%)보다 약간 높게 익명처리 기사를 사용하고 있었다.

취재원을 아예 적시하지 않은 유사인용의 경우도 모든 신문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국민일보, 내일신문, 한국일보 등에서는 유사인용을 하지 않은 기사는 단 한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는 경향신문(88.9%), 동아일보(80.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7) 신문사별 인용유형 현황

신문사별 인용유형 현황을 보면 사람만을 취재원으로 하여 구성된 기사는 단 한건이었다. 반면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 기관과 자료만으로 구성된 기사는 21건(12.5%)이었다. 기관과 자료만이 취재원으로 등장한 기사는 국민일보(33.3%)와 중앙일보(30.8%)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사람과 기관 그리고 자료가 번갈아 취재원으로 등장한 기사는 142건(86.6%)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재원 유형의 다양화 등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관과 자료를 의인화하는 등의 부정적 요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8) 신문사별 제목인용

신문사별 제목의 따옴표인용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전체기사 164건 중 61건(37.2%)에서 따옴표인용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제목에서 가장 많이 따옴표인용을 사용하는 신문사는 한겨레(59.1%)였으며, 그 뒤를 이어 세계일보(50.0%), 조선일보(47.1%), 경향신문(44.4%), 동아일보(40.0%) 순으로 나타났다. 제목에 따옴표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신문사는 중앙일보(7.7%)였으며, 서울신문(15.4%), 국민일보(16.7%)에서도 낮게 사용되고 있었다.

9) 제목인용과 본문인용 일치 여부

제목에 인용된 따옴표 내용이 본문인용 따옴표에서 가져오는 정도를 조사해 본 결과 제목인용과 본문인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39.3%로 나타났다. 본문에 없거나 본문 따옴표인용에도 없는 내용이 제목 따옴표로 나오거나 혹은 그 내용이 일부 변한 것은 편집자의 주관적 술어 구성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신문사별로는 중앙일보(100.0%)가 가장 높으나 1건이라 통계적으로 별반 의미가 없다. 해당 기사가 1건인 신문사들을 제외하고 나면 문화일보(62.5%)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한겨레(38.5%), 조선일보(37.5%) 순으로 나타났다.

5. 결론과 논의

이 연구에서는 중앙일간지 중 2007년도 언론조정신청대상 보도기사들의 뉴스구조가 어떠한 특성들을 갖고 있는가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들을 얻었다.

첫째, 신청인 현황을 보면 국가기관이 35.4%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2007년 한 해 동안 조정신청사건의 전체 신청인 가운데 개인이 50.3%이고, 국가기관이 9.7%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중앙일간지에서는 국가기관이 언론분쟁의 주요 당사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앙일간지에서 국가 및 권력 기관에 대한 환경감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중앙일간지와 국가기관 간의 대립이 여타 매체들에서보다 더욱 컸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앞의 연구결과를 반영하듯 언론조정신청대상이 된 중앙일간지가 다룬 중심주제영역에서도 국가기관의 행위와 관련이 깊다 할 수 있는 정책·행정

(29.3%)과 정치(26.2%) 영역을 다룬 뉴스들이 55.5%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반면 개인 신청인이 주를 이룬다 할 수 있는 범죄·사고 영역 주제는 18.3%로 나타나 국가기관 영역과 뚜렷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중앙일간지들이 국가권력기관의 정책행위에 대한 감시를 활발하게 했으며, 국가기관이 언론의 대정부 보도에 대하여 적극적 대처를 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셋째, 보도행태 측면에서도 중앙일간지 기사들이 일종의 의도를 강하게 갖고 작성되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었다. 객관적 사실 위주로 작성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스트레이트 기사에서도 리드 부분에 언론사의 주관이 내포된 경우가 많았다. 기사 도입부이자 기사 논조를 결정하는 리드 기사 술어에 주관적 가치를 담은 기사들이 54.9%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성격에서도 상반된 의견을 골고루 제시하는 것보다 어느 한 쪽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기사가 58.5%로 절반을 넘었다. 이는 중앙일간지들이 환경감시와 사회고발이라는 기능을 우선시 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일종의 선입견을 갖고서 사회문제에 대처하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넷째, 취재원의 정보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밝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취재원의 실명처리에서는 실명처리를 한 건이라도 하지 않은 기사들이 46.3%로 나타났다. 사람이 취재원으로 전혀 등장하지 않는 유사인용도 76.8%나 되었다. 이는 중앙일간지들이 취재원의 정보 제공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하였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익명 취재원 사용을 제한할 것을 공표했던 한겨레도 이러한 경향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일간지의 취재원 보호 및 취재원의 인격권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도 있으나, 취재보도의 불완전함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어서 신중한 해석을 요하는 부분이다. 즉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성실성의 의

무'가 취재원의 '인격권'과 충돌할 경우 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섯째, 인용유형에서는 사람이 아닌 기관과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기사의 신뢰도 확보 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사 제목에 직접인용 부호를 37.2%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 교과서에서는 스트레이트성 기사에서는 인용부호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직접인용이 낳는 문제들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특히 제목에서의 직접인용과 본문인용 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39.3%나 된 점은 우리나라 중앙일간지들이 제목의 자극적 포장이나 주관적 윤색에 익숙해져 있음을 추론케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중앙일간지들의 언론조정신청대상기사는 국가권력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환경감시, 사회고발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고 할 수 있으나, 객관성 및 신뢰도 확보 면에서는 아직 보완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음을 보여주었다.